

전남 신재생에너지, 해저망 통해 수도권에 공급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 43% 전남에 집중...과잉생산에 출력제한 손실 정부, 8조원 들여 2036년까지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

과잉 생산으로 남아도는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신재생 에너지(전기)가 해저망을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산업단지로 공급된다.

전남지역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 총 생산량의 40%를 웃돌 정도로 풍부하다. 이 같은 전남지역 발전량은 과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의 미비로 인해, 500kW 이상의 발전소에 대한 출력제한(발전중지)이 내려지는 등 전남지역 사업자들의 손실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일 전력거래소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3GW 규모의 국내 태양광 설비 중 43.4%에 달하는 8.8GW(43.36%)가 전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 전남 지역만 놓고 보면 출력제한 대상 태양광 발전소는 1356개소에 달해 자가용(자체발전·소비)을 제외한 도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의 50.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호남에서 생산한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지금까지는 호남에서 남아도는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해 출력제한과 감압 등이 빈번했지만, 해저에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깔아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등에 무탄소전원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HVDC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기간 전력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송전시장에 민간이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놓고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고속도로인 '동해안-수도권 HVDC', 남북을 잇는 세로축 해저 전력고속도로인 '서해안 HVDC'의 적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호남의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력을 해저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HVDC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오는 2036년 기준 한빛 1~6호기를 통해 원전 발전력이 5.9기가와트(GW), 신재생에너지 발전력이 6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라 서해안 HVDC의 준공 목표도 2036년으로 잡았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km,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km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해저 선로 건설을 택한 것은 육상 전력망 추가 건설이 높은 설비 밀집도와 주민 반대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해안 해저 HVDC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해상케이블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해상 그리드 산업을 육성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HVDC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민간의 건설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에만 민간이 참여했지만,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확보와 인허가까지 포괄하는 단키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건설 이후 민간이 운영권까지 갖는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과는 달리 HVDC 건설 후에는 한전에 설비를 귀속시키고 운영도 한전이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도 추진한다.

신안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서해안에 해저 전력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을 보낼 수 있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호남과 영남, 제주 등 남부지방은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출력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태양광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반길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 관계자는 "건설까지 꽤 오랜 기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모르겠다"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도 많게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10GW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지역에서 과잉 생산된 태양광 발전·신재생 에너지를 수도권 산업단지로 공급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신안 지도읍 태천리 태양광 발전단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경제부총리 최상목 지명...6개 부처 개각

농식품 송미령·국토 박상우
해수 강도형·중기 오영주
보훈 강정에...절반이 여성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에 전 속명여



최상목 후보자

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보훈부 장관 후보를 제외한 5명이 경제 관계부처 장관 후보자로, 관료와 학계 전문가를 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장관 후보자 6명 중 절반이 여성으로 성비도 고려한 듯 보인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교체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장관급인 방승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내년 4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윈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금융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 배경과 관련, 기자들에게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가족이 더 무서워"...우리시대 쓸쓸한 자화상 ▶6면

광주FC 정호연, K리그 영플레이어상 ▶18면

굿모닝 여행 - 남도 유람 레크리에이션 ▶22면

중양선거관리위원회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